

최대 19.4%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기회

‘청년미래적금’ 2차 접수 시작

금융위, 농협 등 은행 14곳 통해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34세 이하, 연봉 7500만원 미만 대상 월 50만원 납입시 최대 2255만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7일부터 16일까지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의 갈아타기도 한시 허용한다. 내년 중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이 예정된 만큼, 지난 1차 가입기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했거나 2차 가입기간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혜택을 소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1차 신청 당시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가구원 동의 필요, 복잡한 상품 가입 절차 등을 이유로 가입을 놓친 청년이 많았던 만큼,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통해 상품 수요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14개 취급기관(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

〈청년미래적금 상품구조 및 소득기준〉

/금융위원회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충족)		기여금 매칭 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맞벌이 2인 가구)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천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천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2%	150% 이하 (200% 이하)
		신규 재직	연매출 1억원 이하		

요하지 않지만, 소득 심사 과정에서는 가구원 동의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 서금원은 오는 11월 12~13일 중 심사 결과를 안내하며, 취급기관 별 계좌개설은 11월 16~27일 진행된다.

◆ 내년 최고 연 25% 금리 ‘소급적용’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면서 연 75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했다면 12%의 기여금을 제공하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여금과 별도로 가입

기관별 이자를 제공한다. 금리는 연 5%의 기본금리에 가입기관별로 2~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형을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 및 8%의 최고금리를 적용한 실질 이자액은 연 19.4%의 적금과 맞먹는다.

정부는 최근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의 기여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소득 6000만~7500만원의 청년에 일반형에 해당하는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대형도 기여금 비율을 납입액의 15%까지 상향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기여금을 25%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 확대 및 기

여금 상향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반기별 운영이 예정된 청년미래적금 신규 신청 시 해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차 가입기간이나 2차 가입기간 동안 상품에 가입한 청년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소급해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청년도약계좌와 ‘갈아타기’ 허용

정부는 2차 가입기간 동안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갈아타기도 추가 허용한다. 정부는 청년 및 유관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1차 가입신청 당시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의 가입기준 상향과 지원금 확대가 추진되는 만큼 갈아타기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갈아타기 기간 동안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지급된 정부지원금을 보전한다. 만기 해지와 동일하게 비교세 혜택도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2차 신청기간 내에 청년미래적금을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했던 취급기관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갈아타기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을 가

입했다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이 불가해질 수 있다.

◆ 가입 시 우대금리 고려해야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별로 최고 연 8%의 이자를 제공하는 만큼,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대형을 기준으로 매달 5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연 5%라면 만기시 약 2171만원을 받는 반면, 금리가 연 8%라면 만기시 약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상향이 적용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각 은행과 우체국은 인터넷뱅킹 및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을 통해 청년미래적금의 우대금리 요건을 공개하고 있다.

2차 가입 신청 기간을 앞두고 최대 연 8%의 금리를 제시하는 취급기관은 6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이다. 각 은행은 금리 요건으로 가입기간 내 주거래 이력, 계열사 상품 가입, 당행 카드 이용, 당행 예적금 미가입 등 요건을 제시한다. 단, 신한은행은 우대요건에 당행에서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갈아타기를 지정하고 있어 청년미래적금만으론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공공주택 착공, 목표의 27% 그쳐… 연내 6만호 ‘속도전’

국토부, 3분기 수도권 착공 1.7만호 착공 예정물량 4.5만호 4분기 집중 내년 소규모 정비 포함 8.4만호 목표

정부가 연일 ‘닥공’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실적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착공기간 단축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착공은 3분기까지 1만7000호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연간 목표 6만2000호의 27.4%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GH) 등과 함께 제3차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회의를 갖고 3분기까지의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과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착공 예정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된 만큼 6만호 인원은 가능할 것이라 입장이다.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신축 현장 전경.

/뉴시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며 “공공주택 약 4만5000호를 포함해 신축매입, 민간정비가 모두 4분기에 착공 예정 물량이 몰려 있어 최대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현장별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부분 착공 목표 물량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포함해 8만4000호 인원이다.

전체 수도권의 공급 상황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8·13대책을 통해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 등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과 공공택지 착공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착공 누계실적은 6만

5000호로 연간 목표치 26만9000호(+α) 대비 24.2% 수준에 그쳤다. 착공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과거 평균치 대비 급감했던 작년과 비교했을 을 감안하면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

건설연 관계자는 “연말까지 착공 목표 달성은 어려운 전망”이라며 “수도권 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부분의 공급 동력 회복 여부가 대책 실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강남 매물이 많이 늘었음을 인용하며 공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전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치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 얼마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LG유플러스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금융거래 정보·통신 데이터 연계 예방체계 구축·의심징후 신속 탐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LG유플러스와 협력한다.

우리은행은 LG유플러스와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 데이터를 연계한 보이스피싱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기 의심징후를 보다 신속하게 탐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양사 간 체결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양사는 앞서 지난 8월 27일 우리은행 금융사기 예방시스템과 LG유플러스의 ‘익시오(IXI-O)’ 정보 간 실시간 연동을 완료했다. 인공지능 기반 통화앱 ‘익시오(IXI-O)’ 탐지 정보는 LG유플러스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위험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통화 단계 위험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우리은행은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 데이터 기반의 전용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정책을 마련했다. 양사는 앞으로 정보공유 체계의 2차 고도화를 통해 우리은행 FDS에서 탐지한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LG유플러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금융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들며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양사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고객이 금융과 통신을 아우르는 보호 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양사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다 안전한 금융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

LH, 상가·오피스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2125호 접수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2125호의 신청 물량을 확보했다. 당초 목표였던 2000호보다 125호 많은 규모로, LH는 심의를 거쳐 연말부터 약정 체결에 나선다. 6일 LH에 따르면 2026년 비주택 리모

델링 사업(약정 방식) 공고 결과 총 2125호가 접수됐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청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당초 9월 9일까지였던 신청 접수 마감일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7월 30일 열린 사업자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반영해 접수기간을 한 차례 늘렸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소화 방식도 추가로 도입했다. 신청자가 건물 정보 등을 간략히 적은 접수요청서를 제출하면 LH가 이를 토대로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본 신청서류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달 서류심사와 다음달 매입

/이현진 기자 lhj@